

한중경제포럼

제08-01호 2008년 3월 28일

중국의 거시경제 현황과 정책 방향

2008년 제1회 한·중경제포럼

1. 주제 : 중국의 거시경제 현황과 주요 문제점
2. 일시 : 2008. 2. 27(수) 16:00~20:00
3. 발표자 :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 장쇼우징(张晓晶) 주임

1. 최근 인플레이션 추세

- 여타 선진국 경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영향으로 둔화조짐을 보인 것과는 달리 중국경제는 여전히 고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향후 거시경제 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2007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5%~6.5%에 달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시현하였으며 2008년 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7.1% 상승함으로써 1997년 이후 월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
- 이 같은 물가상승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됨.
 - 춘절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소비확대로 가격상승이 촉진
 - 최근 폭설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및 물류비용의 상승으로 농산물, 식료품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

- 2007년 1월 소비자물가가 비교적 낮았음.

- 이와 동시에 2008년 1월 공산품 출하가격 상승률이 6.1%로 과거(3% 내외)에 비해 크게 상승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우려를 심화시킴.

2. 중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

가. 구조적 물가상승

□ 2007년 9월 이후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우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최근 중국의 물가상승은 구조적으로 식품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및 석유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으며 핵심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낮아 전면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나. 인플레이션과 국내총생산(GDP)의 관계(필립스 곡선)

□ 2008년 중국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다. 국내식품가격과 국제식품가격 상승 추세

□ 상당수의 거시경제학자들은 중국 국내식품가격 상승과 국제식품가격 상승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 추세를 역전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면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

-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승추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이러한 판단 근거는 첫째, 국제식품가격 상승추세는 지난 40년 동안 줄곧 비식품가격 상승추세보다 낮았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임.

- 둘째, 중국의 식량 수입 규모가 전체 국내생산량의 5%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제식품가격 상승이 중국 국내 식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

- 셋째, 국내 식량가격과 국제 식량가격의 관계를 보면, 현재 국내의 일부 식량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지만 중국은 식량안전을 고려하여 수입을 확대하지 않음.

□ 다만 세계기후온난화(공급요인: 생산량 감소)와 바이오에너지 문제(수요요인: 옥수수 등 관련 곡물에 대한 수요확대)는 향후 국제식품가격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

라. 생산비용 상승과 생산능력 과잉

□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생산능력 과잉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¹⁾.

- 2008년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노동계약법의 영향으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나 현재 상당규모의 잉여노동력이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토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 환경 및 자연보호 정책에 따른 원가 상승 등의 요인이 있으나 중국정부의 효율적인 조정을 기대

1) 2000년~2001년에 이어 2005~2006년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생산능력 과잉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우려하였으나, 지난 2년 동안 중국경제의 고성장으로 생산능력 과잉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음. 그러나 생산능력 과잉문제는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만일 2008년 중국경제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생산능력 과잉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

마. 세계경제 인플레이션

□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아래 <표 1>에서 보면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1980년대 14.1%에서 2004년 3.9%로 감소되었으며 2007
년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

- 2008년 인플레이션을 전망치(IMF 추정치)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추
정

<표 1>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율

(단위: %)

	1980~84	1985~89	1990~94	1995~99	200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세계전체	14.1	15.5	30.4	8.4	4.1	3.9	-	-	-	-
선진국	8.7	3.9	3.8	2	2	2	2.3	2.3	2.1	2
개도국	31.4	48	53.2	13.1	5.7	5.4	5.2	5.2	5.9	5.3
아프리카	16.8	17.9	39.8	20.6	11.8	5.5	6.6	6.3	6.6	6
아시아	9	11.5	10.5	7.3	2.3	4.1	3.6	4	5.3	4.4
중남미	82.4	185.9	232.6	17.2	8.2	6.5	6.3	5.4	5.3	5.8
중동	18.6	22.5	30.4	29.6	16.4	7.2	6.9	7.5	10.8	9.2
체제전환국	6.2	7.7	363.2	53.9	14.5	8.2	8.5	7.2	7	6.2

3. 향후 거시경제 정책 방향

가. 기본방향: 긴축정책

□ 중국정부는 2007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향후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힘.

- 중국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고성장으로 인한 과열억제’와 ‘인플레이션 방지’를 거시정책 방향으로 설정
하고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을 시사

□ 한편으로 이러한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긴축기조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최근 예상하지 못한 폭설재해가 대내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2003년 사스발생을 예로 들며 폭설재해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음을 우려

- 그러나 폭설재해는 단기적인 충격으로 파악되며 경기과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대외적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임.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경제 침체를 몰고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판단

- 중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손실이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나. 재정정책

□ 최근 중국은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중국의 재정적자 추이: 2006년 2,450억 위안 → 2007년 2,000억 위안 → 2008년 1,800억 위안(전망치)

- 또한 세수조정(자원세와 환경세를 징수 등),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한 유동성 흡수 등으로 과열을 방지할 계획임.

□ 그러나 중국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재정지출(농촌 및 낙후지역 재정지원, 사회보장제도 지원 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 확장적인 재정정책 요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또한 만일의 경우 중국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이를 대비한 재정지출의 확대도 예상해 볼 수 있음.

다. 통화정책

- 중국정부의 주요 긴축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창구지도와 행정통제 포함), 기준율 인상, 금리인상, 인민폐 절상 등을 들 수 있음.
- 2007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 중국인민은행은 은행들의 신용대출에 대해 월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통제 및 관리조치를 예고하였으나, 실제로 은행들의 신용대출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8년 1월 신용대출은 증가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신용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신용대출에 대한 통제조치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하반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고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이러한 조치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긴축통화정책(금리인상, 인민폐 절상)의 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금리인상으로 핫머니 유입이 확대되어 인민폐 절상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금리인상의 결과로도 식품가격 상승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구조적 물가상승을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인민폐 절상이 가속화되면 한편으로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소비수요를 자극함으로써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급속한 인민폐 절상은 연해지역 수출기업의 경영난을 야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금리인상으로 은행예금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중국의 자본시장(직접투자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음.

4. 중국 거시경제의 주요 문제점 진단

가. 경기과열

- 중국경제는 최근 폭설재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과열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신용대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수출 역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 이후에도 중국경제의 펀더멘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 정책의 최대 과제는 과열방지라고 할 수 있음.

나. 대외무역 흑자 지속

- 최근 중국정부는 수출환급세 조정, 인민폐 평가절상 등을 통해 대외무역 흑자규모를 감소하여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단기 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이 대외무역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선진국의 경우²⁾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짧은 10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단기 내 흑자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또한 중국의 대외무역수지 조정만으로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님.

다. 노동시장의 변화

- 새로운 노동계약법의 등장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중시되고 고용비용이 상승함으로써 노동시장에도 새로

2) 미국은 90여 년 동안, 독일은 50년, 일본은 40년 동 흑자를 지속

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라.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

□ 은행의 부실대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채, 사회보장기금 부족 등의 요인으로 향후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음.

- 특히 북경, 상해와 같은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대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조정될 경우 금융위기가 촉발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임.

- 그러나 금융위기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중국정부는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질의·응답>

질문 1: 최근 중국경제 상황으로 볼 때 긴축정책요인(1월 신용대출 확대,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과 확대 정책요인(폭설재해 복구를 위한 고정자산투자 증가, 미국경제 둔화)이 상존하고 있는데 향후 거시경제정책 방향은?

답변 1:

현재 중국경제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경기 과열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긴축정책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중국인민은행의 2007년 4/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에서도 이 같은 관점이 나타남.

질문 2: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준율 인상, 금리인상, 위안화 절상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답변 2:

중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준율 인상, 금리인상, 위안화 절상, 중앙은행의 창구지도와 행정통제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질문 3: 중국정부의 물가통제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3:

중국정부의 물가통제 방법을 보면 첫째, 제품 중 90%이상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일부 핵심 제품은 여전히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음. 둘째, 중요한 제품은 우선 물가관리 부문에 신고 해야 함. 셋째, 중요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단기 내 5% 이상 가격이 상승한 물품은 물가관리 부문에 신고해야 함.

대내외적으로 중국정부의 행정적인 가격통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강력한 물가통제 조치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함. 그러나 최근 폭설재해로 인해 정부가 일시적인 물가통제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음.

질문 4: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우 농경지 감소와 인구증가, 축산업 발전으로 인한 곡물 수요 증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바이오 에너지 증가와 그로 인한 곡물 수요 증가, 농산물 수입확대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답변 4: 중국정부는 1996~1998년에 농산품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민수입 하락을 막기 위해 농산물 구입정책을 펴왔으나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해 실패를 경험함. 또한 농산품 생산량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태도와 생태보호 정책으로 인해 점차 농산품 생산량 감소와 경작지 감소에 영향을 주었음. 이에 따라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 조정 중에 있음. 예를 들어 일부지역에서 퇴경환림정책(경작지를 반환하고 산림지대로 만드는 정책)은 이제 실시하지 않고 있음.

한편, 중국의 농업기술 수준이 발전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평균 40%정도 제고됨. 중국은 화학 비료 사용으로 생산량 증가 효과를 얻었으나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생산량 제고를 위해서는 기계화, 녹색혁명 등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또한 바이오 에너지 역시 큰 문제로, 중국은 에너지 절약 및 생산성 제고 체제를 완비하고, 에너지 공급의 다원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향후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세계경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바, 만일 세계경제가 둔화국면에 접어들다면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전망이다.